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

포용국가 · 균형발전의 원동력, 인구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자치 강화를 위해 30년 만에 ‘100만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도시위 위주의 개정안으로 특례시 지정에 전주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의 심사가 예상되고 있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아야 하는 당위성과 향후 과제를 되짚어 본다.

▲ 왜 전주 특례시인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수도권과 광역도시 쏠림현상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역별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역이 고루 상생하는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이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어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행정행위가 넓어지고 해당 도의 승인이 없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이 가능하고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로 지정 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이 지난 4월 4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언론 대표와 시민 및 관계자들이 전주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을 떠난 전출자가 무려 7만3751명에 달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 인구는 현재 183만2227명으로 50년 전인 1965년 251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이는 1960년대 초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수출정책에 따라 경부(서울-부산)축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 집중 육성되며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전북 인구 감소는 가속화 됐다.

정부의 광역단위 위주의 정책으로 1980년대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는 해당 광역의 도(道)까지 상생 발전시키

이르면 내달 국회 상임위 심사 예상 ‘불균형 심화’ 문제점 제기로 정부안 보완 개정안 발의 전주시, 지정 필요성·당위성 건의 시민들과 연대 강화

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광역시가 없는 도시들은 더디게 성장했다.

특히 전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와 쇠퇴한 악순환의 상황에서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지역불균형이

속화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 특례시 지정, 국가 균형발전 해법!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인구만을 내놓자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 기준은 기존의 광역시 선정 기준과 동일 할 뿐 아니라 대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어도 수도권 쏠림과 중앙의 흡입력이 이미 너무 강해 지방도시는 늘 제자리였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해 내놓은 중앙부처의 혁신도시 정책 역시 광역단위로 추진됐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있는 권

역은 2~3개(부산·울산·경남)의 몫,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1개의 몫으로 조소됐다.

이 밖에 2019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예타면제 사업도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위주로 선정되었지만, 광역단위 사업 배정에 따라 권역별로 전북의 사업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보아 특례시 지정 역시 차별의 반복을 가져 올 수 있다.

전주는 인구가 약 66만 수준으로 전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이다. 또 전주에는 264개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고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지역 30%를 넘었다. 이를 토대로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달리 지역적 연계가 중시되는 경제기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주에서 실제로 주간에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수준이지만,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태부족이어서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전주는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

▲ 특례시 지정, 인구보다 지역 특성 반영해야

정부가 인구 오히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발전 불균형 심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를 보완한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며 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4곳에 인구 50만 이상으로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며, 도청 소재지인 도시를 포함시켰다.

또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현행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50만 이상(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으로 요청한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힘을 얻은 전주시는 전국 행정학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언론인 등과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여기에 전북지역 시군단체장들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전북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례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의의이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가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특례시 지정 기준을 통한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
건보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박 의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공단의 주요업무와 지사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내방 민원인을 만나는 등 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현장체감의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설공단, 덕진수영장서
안전사고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정성환)이 공단은 10일 덕진수영장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교육에 참석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익혔다.

이날 교육은 수영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자인병원 전문강사인 김태영 차장이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공단 직원들은 응급구조반, 이송반, 지원반 등으로 각기 역할을 나눠 훈련에 참여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에서 새롭고 즐거운 혁신의 시작’

시, 사회혁신 한마당 18~19일 개최... 컨퍼런스·체인메이커 수다 등 진행

대한민국 사회혁신을 이끌어온 전주시가 도전하는 사회혁신가 양성을 위한 축제의 마당을 펼친다.

전주는 그간 삼매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변화시키는 서도송예술촌 프로젝트와 폐공장을 문화예술전시공간으로 만든 팔복예술공장, 자동차로 가득했던 백제대로를 사람·생태·문화의 길로 만든 첫미중길 등 다양한 도시혁신을 이뤄내 사회혁신 선도시로 주목을 받아왔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충경로 사람의 거리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19 전주시사회혁신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2019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사회혁신한마당에서는 ‘사회혁신’이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한 강연과 공연, 체험, 전시 등 9개 프로그램과 13개 강연, 70여개 부스 등이 이틀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은 사회혁신 한마당의 시작을 알리며 모든 주체들이 하나 되어 축하하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한미당 대표 슬로건인 ‘새롭고 즐거운 혁신의 시작’을 표현한 대형 문구와 전주의 자랑인 한지를 활용한 등불로 멋들어진 혁신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 /송효철 기자

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이번 한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혁신의 개념을 흥미롭게 전달해 혁신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 확장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의제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장은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일상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혁신에 대해 뭐지 모르겠지만 그냥 끌리는 분들 등 모든 분들과 함께 새롭고 즐거운 혁신의 시작 ‘2019 전주시 사회혁신한마당’에서 만나 뵙고 즐겁게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가슴 가득 하늘 담고, 온 몸으로 바람 안고’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 26-27일 전주시 일원서

세계 최정속급 인라인 선수와 동호인 5000여명이 참가하는 ‘제17회 2019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 인라인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첫날 송천동 인라인경기장에서 열리는 인라인 트랙경기와 둘째 날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전주시 일원을 누비는 인라인 마라톤경기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인라인 트랙경기에는 500여명의 인

라인 생활체육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하며, 메인경기인 인라인 마라톤경기에는 총 3000여명의 국내외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42km 오픈부와 21km(청년·장년·실버·단체부), 6km(초등부경쟁·비경쟁) 등 총 7개 부문으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특히 올해 인라인마라톤 경기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대만 등 13개국 50명의 외국인 선수와 국내 엘리트선수 200여명 등이 참가해 그간 같고 닮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인라인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전주가 국제적인 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라인 마라톤대회가 진행되는 오는 27일에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성모병원, 전주월드컵경기장 구간 도로가 부분 통제된다. /송효철 기자

남원 요천 자전거 도로 유도등 설치 민원 제기

조명시설 미비로 사고 발생... 시 “국가하천 관리 주체
익산국토청에 건의 내년 설치예산 확보토록 할 것”

남원시가 시민 건강과 레저 활동을 위해 조성한 요천 호안 내의 자전거가 도로에 야간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시가지 일원과 광치천 및 요천에 생활도로와 산책로 및 레저형 자전거 도로를 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중 요천 양측 호안에 시설된 자전거 도로는 총 연장 31.5km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천의 자전거 도로에는 유도등이나 기타 조명시설이 미비해 넘어지거나 부딪혀 상해를 입은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남원시가 해당 자전거도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남원시는 과거 이곳 자전거로 바닥에 하천 특성으로 전기용이 아닌 축전지로 가동되는 유도등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축전지 방식 유도등은 전지 교체나 집중호우나 수위 상승시에는 파손이 심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전지교체가 없고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야간유도등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하천 관리 주체인 익산국토청에 설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으로 2020년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예방호안 상단에 스탠드형 가로등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시민들이 야간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무 기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활성화’ 협약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앞으로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승수·백종만)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는 10일 장봉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과 노경일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양기관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19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솔루션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전주시 재가 장애인 신규 참여자 발굴 및 체육활동 연계 △장애유형별 개인맞춤형 재활체육 연계 △지역 장애인 방문상담체계 구축 등 재가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재가 장애인에게 생활체육활동과 재활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남아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